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전통적으로 고용서비스는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취업 알선에 초점을 두었으나 노동 시장의 변화에 따라 그 영역이 점차 넓어지면서 현재는 취업 알선, 노동시장 정보 제공,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집행, 실업급여나 실업부조와 같은 실업 시 소득 지원 등 네 가지 서비스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용서비스는 구인과 구직의 연결을 지원하고, 투명한 노동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원활한 직업생활과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하고 인력 수급의 원활화를 촉진하며,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고용서비스는 특히 취약계층의 취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노동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용조정 충격 완화를 지원하여 사회 안정에도 기여한다. 고용서비스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공적부조 수급자 등의 재취업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자립과 자아실현을 촉진한다.

2014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실업률은 3.4%로서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일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한 사실상 실업자가 매우 많다. 공식 실업자는 91만 명이지만 구직단념자가 45만 명, '쉬었음'이 138만 명, 청년 NEET가 130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중요한 고용서비스 대상이다. 취업해 있지만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로 빈곤층 또한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자활능력이 있는 공적부조 수급자도 고용서비스가 절실한 사람들이다. 또한 적합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고용서비스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고용서비스를 간절하게 바라는 다양한 구직자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소개하며,

적합한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구직활동 기간에 실업급여 등 소득 보전도 해주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행복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고용 위기의 시대에 이처럼 중요한 고용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도 밀리고 있다. 이는 GDP 대비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출 비중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의 약 1/8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서비스의 혁신이 필요하다.

첫째, 공공고용서비스 전달 체계를 선진화하고,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센터의 인력 확충과 전문성 향상,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프로세스에서 수요자(구직자, 취업자, 기업 등) 중심으로의 개선, 지나치게 복잡하고 고용·복지 프로그램에서 국민 중심 맞춤형 패키지 사업으로의 통합과 재구조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종사자 수는 실업자 수나 경제활동인구 등을 기준으로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할 때 1/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아무리 중앙부처 차원에서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강조해도 일선 서비스 창구에서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자격요건을 따져서 고용지원금이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데만 급급할 뿐 취업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더구나 공무원의 순환 배치 인사원칙으로 인해 일선 고용센터에서의 업무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이들이 전문역량을 축적해 갈 수 있도록 인사와 교육훈련 체계를 합리화하여야 한다.

현재의 공급자 중심, 행정업무 처리 중심의 고용서비스 프로세스를 구직자의 복합적인 취업장애요인을 진단하여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실업자 직업훈련이 취업지원과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실업자의 취업장애요인을 진단하여 취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 직업능력이 미흡한 구직자에게 직업훈련을 수강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어 지나치게 복잡하고 유사 중복사업이 많은 고용 및 복지 프로그램들을 통합·패키지화하여 국민 중심의 고용서비스 프로세스 혁신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러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산재해 있는 복잡한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기관들을 연계 또는 통합하여 원스톱 고용·복지 서비스센터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나 아직 한 지붕 아래 지역 유관 기관들이 모여 있는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유관기관 간의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원스톱 고용·복지 통합 서비스센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공과 민간 고용서비스 간의 건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민간고용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품질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즉,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을 강화하면서 위탁기간을 장기화하고 위탁규모를 대폭 늘려 수탁기관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위탁비 수준을 현실화하되 착수금 비중은 줄이고 성과급 비중을 높여 수탁기관이 취업성과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행 직업안정법을 (가칭)‘고용서비스발전법’ 등으로 전면 개정하여 공공과 민간 고용서비스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서비스발전법에서는 고용서비스의 개념과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방식,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위한 사례 관리 원칙,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원스톱 고용·복지 통합 서비스센터의 설치·운영과 지역 파트너십 구축, 고용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과 재교육 체계,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의 원칙, 민간고용서비스시장 육성을 위한 기본 원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KRIVET

〈9월 주제: 고용·직업교육훈련 정책 진단 II: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개편〉

지난 호와 이번 호 〈이슈 분석〉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 및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지난 호에서는 ‘교육·청년층 고용’을 중심 주제로 다루었으며, 이번 호에서는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개편 방향’을 중점적으로 조명한다.

박근혜 정부는 5대 국정목표 가운데 ‘맞춤형 고용 복지’의 실현을 통해 학력보다는 능력이 취업에 중요시 되는 사회 풍토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학력 중심의 고용 관행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구축과 고용과 복지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맞춤형 고용 복지’의 실현을 위해 고려 가능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 가운데,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구축과 관련한 세 가지 이슈를 다루며,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관련한 두 가지 이슈를 분석한다. 또한 고용과 복지의 연계에 관한 한 가지 이슈와 최근의 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 동향에 관한 한 가지 이슈를 다룬다.

이번 호 〈이슈 분석〉에서 제기된 여러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맞춤형 고용 복지’의 실현이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이번 호 〈이슈 분석〉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강화
- ◆ 직업능력개발훈련 진단과 개선 방안
-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과 취약계층 고용-복지 서비스의 과제
- ◆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의 개발 현황과 과제
- ◆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자격제도 및 국가역량체계 구축
- ◆ 직업교육훈련 국제협력 강화
- ◆ 최근 임금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참여 동향